

한국법제연구원, 네팔 정부와 연구 교류 계획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은 네팔입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네팔정부 고위관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법제개혁 및 법률개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공효영(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전문연구원)

지난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국제협력실 실무진들은 네팔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하였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네팔입법위원회(Nepal Law Commission)와의 업무협약 체결, 네팔 정부 고위관료들과의 면담을 통한 법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네팔입법위원회는 네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네팔 정부의 입법 제·개정 작업을 지원하고, 네팔 법제의 성문화 및 일관성 확보, 입법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네팔 정부에 법제 개혁과 법령 개정에 관한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7년 가을부터 네팔입법위원회와 입법 지원 및 연구 교류를



한국법제연구원-네팔입법위원회 업무협약체결

협의해왔으며,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नेपाल입법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 및 국제학술행사에 नेपाल입법위원회의 마드합 파우델(Madhab Paudel) 위원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9년 2월 19일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नेपाल입법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 역량강화 연수의 지속적 실시, 연구자 및 연구 관련 정보의 활발한 교환 등에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도 नेपाल입법위원회의 ALIN 회원 신규가입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नेपाल 법률 제·개정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출장단은 또한 नेपाल 정부의 고위각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नेपाल 하원의 사법인권위원회(Law, Justice and Human Rights Committee) 및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Legislative Management Committee)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에 नेपाल 헌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약 172개의 법령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령 개정 작업은 नेपाल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계에서 नेपाल입법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법령 초안은 법무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입안된다. नेपाल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특히 한국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출장단에게 해당 주제로 짧은 강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नेपाल 상·하원 위원회의 위원들은 नेपाल 헌법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주문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 출장단은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법령 개정 경험과 역량을 전수 할 수 있는 역량강화연수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출장단은 नेपाल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를 방문하여 법무장관 및 법무차관과 면담을 하였다. नेपाल 법무부는 대법원과 의회 간의 소통과 협조를 원활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 입안되는 법안의 최종 초안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नेपाल은 아직 사전·사후 입법평가가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약 99퍼센트 이상이 정부입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Money Bill로 불리는 재정 수반 법안은 의회 하원에서 입안하고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네팔입법위원회 방문



네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와의 간담회



네팔 법무장관실 방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바누 박타 다칼(Bhanu Bhakta Dhakal) 네팔 법무장관 역시 네팔 헌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작업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경험 및 노하우의 공유를 강조하였다.

네팔의 상·하원 위원회 및 법무부, 네팔입법위원회 방문은 네팔이라는 국가를 이해하고 네팔의 입법 및 법률 제·개정 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의 법령 제·개정 및 과거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간단하게나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치·경제 발전 과정 중에 피치 못하게 겪게 되는 문제들을 미리 경험하고 대비 해 온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네팔 입법 관련 기관에게 전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향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